

광주시 “산업·경제 활력”...불합리 규제 집중발굴

오는 5월 27일까지 100일간 민생경제·일자리 등 5대 분야 주1회 직능단체 현장 애로 청취 “지역산업·시민 일상생활 직결”

광주시가 오는 5월27일까지 100일간 불합리한 규제의 집중발굴에 나선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축된 지역 산업과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시정 목표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정책 추진과 시민체감도가 큰 비예산 규제 발굴을 위해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 5대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영업·고용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지역투자,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대자보도시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도시 조성을 저해하는 사항들,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돌봄, 복지, 교육 등을 위한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국민안전, 소방, 보건, 문화, 관광, 주택, 환경 등 각종 생활 불편을 접수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은 이날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실 이메일(silver5445@korea.kr),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혁신평가

담당관(6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062-613-2561, 2562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특히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를 주 1회 현장 방문해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에 직접 건의해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개선은 꼭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성장과 시민 일상생활 등에 직결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모든 기관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자치법규 일제정비 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상했다.

노병하 기자 byeonha.no@jinilbo.com

광주시,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40억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등서 접수

광주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과 지속할 수 있는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0년 세종시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임신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4인 기준 가구당 월 10만원의 바우처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대 10개월(3~12월)간 지원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 7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농협 하나로마트, GS 25 편의점, 온라인 소핑몰(농협몰 등) 등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용처는 이달말 확정된다.

신청은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온라인 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551-0857)를 통해 하면 된다.

대리신청자, 임신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노병하 기자



임산부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홍보 캠페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17일 북구 본초동 본초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홍보 캠페인에서 임신조끼를 입고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시, 자동차번호판 봉인 63년만에 폐지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없어

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잇따랐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스틸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봉인훼손 때 번호판을 재발급받기 위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차량말소 때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또 봉인 미 부착 운행으로 부과하던 과태료와 벌금도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볼트 풀림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고용인력 5인 미만 10곳 선정

전남도는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 사업장 중 여성이 대표자인 상시 고용인력 5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기업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광고·홍보·마케팅 지원, 두 개 분야로, 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전남도 여성정책관실로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기간 중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사업 진행 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각 기업에 적시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시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본격 운영

취약마을 맞춤형 복지·문화 제공 보행보조기 세척·수리 신규 추가

전남도는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에게 맞춤형 보건·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5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17일 보성 동암경로당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행복버스는 주 4회 270개 마을을 방문해, 7000여 명의 도민에게 26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보행보조기 세척·수리 △는 건강검사 △찾아가는 금융 상담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성 동암마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혈압·혈당 검사, 치매 검사 및 한방 치료 등 보건 서비스와 키오스크 교육, 이·미용, 네일아트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됐다. 또한 문화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판소리 공연과 영화 상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보행보조기 수리·세척을 받은 한 주민은 “오래된 보조기로 불편을 겪던 차에 전남행복버스 덕분에 수리를 받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도 270개 마을을 찾아 보건·복지·문화 서비스를 하고, 모든 마을에 행복이 전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2021년 8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663개 마을, 2만 명 이상 도민을 만나 총 16만700여 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용 만족도 또한 99%에 달한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전남행복버스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으며, 전북·경남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행복버스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미용, 문화 공연, 현장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관심 있는 도민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061-287-8152)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전남 가금류 도축장 방역점검·도축검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가 등 타 시도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도축장 방역점검과 도축검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험소는 AI 확산 방지 대책으로 가금류 도축장과 출하 농가 AI 검사와, 닭·오리 생체·해체검사를 강화하고, 적절한 소독약품 사용 여부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도축장에서의 AI 방역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단계 격상에 따라 도축장 출하농가 중 매주 닭 10%, 오리 30% 이상을 검사하고,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계열사 농가는 도축장 출하 시 닭 20%, 오리 60% 이상으로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도축장 환경도 주 1회 지속해서 검사하고 소독시설 관리상태, 생축 운반차량과 운전자의 소독 및 세척 상태를 점검하며, 가금류 이동승인서와 소독필증 보유 여부도 점검한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금류 도축장의 방역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께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며 “닭, 오리 사육농가는 AI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남에서 도축한 가금류는 닭 3889만3000마리, 오리 2975만9000마리다. 이는 전국 오리 도축물량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오지현 기자